

이슈브리프

ISSUE BRIEF

발행일 2017년 11월 17일

| 금주의 이슈 |

I.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추진의 정책적 시사점 / 1

II. 19대 대선, 팩트체크 & 가짜뉴스 조사 분석 및
시사점 / 7

금주의 이슈

- ◆ 금주는 제1편에서는 미국의 탈퇴선언으로 촉발된 TPP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 좌초 위기가 일본 주도의 CPTPP(포괄적·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로 새로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, 제2편에서는 19대 대선 중 등장한 ‘팩트 체크 저널리즘’에 관해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시함
- ◆ 역내 무역협정(TPP, CPTPP, RECEPT)을 둘러싸고 미·일·중 3강이 아·태지역 내 자국의 경제적 입지 확대를 꾀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CPTPP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. 더불어서 중국이 주도하는 RCEP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의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, 역내에서의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임
- ◆ 지난 대선 선거캠페인 중 제기된 각종 공약과 주장들에 대해 언론사들이 판결을 내려주는 이른바 ‘팩트체크 저널리즘’이 새로이 선을 보였음. 한국언론재단의 조사에 따르면, 대선후보에 관련된 의혹제기 내용에 관한 팩트체크 기사를 본 후 입장을 바꾼 답변자가 4할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. 관련된 ‘네이버&서울대 팩트체크’는 팩트체크의 오남용 사례이므로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며 당에서도 국회 제출된 해당 법률안의 통과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

2017. 11. 17

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대 식

I.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추진의 정책적 시사점

트럼프행정부의 탈퇴선언으로 촉발된 TPP 좌초 위기가 일본 주도의 CPTPP로 기사화생중임. 역내 무역협정(TPP, CPTPP, RECEP)을 둘러싸고 미·일·중 3강이 아·태지역 내 자국의 경제적 입지 확대를 꾀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CPTPP에의 참여 및 RCEP에서의 적극적 활동이 요망됨

1. 日 주도의 CPTPP 新출범의 배경과 주요 내용

□ 금년 초 美트럼프대통령의 서명철회(1.23) 및 탈퇴선언으로 좌초 직전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이 ‘CPTPP’ 로 개명하여 새로이 출범

※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-Pacific Partnership을 말하며, 우리말로는 ‘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’으로 불림

○ 미국을 제외한 TPP 11개국이 우선 참여한 ‘TPP11’ 형태로 추진

-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에 참석한 11개국은 기존 TPP 조항 중 핵심요소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협정비준을 위한 최대난관을 통과

• 일본, 호주, 브루나이, 캐나다, 칠레, 말레이시아, 멕시코, 뉴질랜드, 페루, 싱가포르, 베트남 등 11개국이며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

대형 자유무역협정의 형태

- 동 합의는 향후 절반 이상의 참여국에서 비준될 경우 발효 효과
- 경제대국 미국이 제외되었지만 세계 GDP의 12.9%, 세계 교역량의 14.9%, 세계 인구의 6.9%를 차지하는 글로벌 거대 경제권 탄생 예고
- 역내 시장의 무역장벽 해소, 농작물·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주된 목적으로 추진

○ 일련의 교섭과정에서 20여개 항목의 ‘동결조항’을 남겨둠으로써 향후 미국의 再참여를 기대

- 저작권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보호 분야, 의약품 개발데이터 보호 기간 등 신약개발 분야 등 미국과 관련된 조항들의 시행 유보

□ CPTPP 협상 주도하는 일본의 경제적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

○ 일본 언론은 자국의 주도로 TPP가 재가동되었음을 대서특필하고 있으며, 향후 자동차, IT시장 등에서의 일본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에 고무된 분위기

- 일본 자동차업계의 경우 기존 아·태지역 국가들과의 FTA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 축소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및 캐나다 등 FTA미체결국가로의 수출 확대효과 기대

- IT업계의 경우 보다 용이한 아·태지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기대

- CPTPP 협상이 일본 주도로 최종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, 아·태시장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것임

2. 美·日·中 3국의 경제주도권 각축장이 된 아·태지역

□ 미국 주도의 아·태지역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

- TPP는 미국(오바마 행정부) 아·태지역 내 중국의 세력확장 견제를 위해 추진한 핵심 정책
-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연초 TPP 탈퇴를 선언(1.23)하고, 대신 자국 우선주의, 힘의 우위를 통한 국익 관철을 위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강화정책을 표방
 - TPP와 같은 다자협정에서 양자협정으로 선회

□ 일본의 적극적인 포괄적·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CPTPP)

- 미국의 탈퇴선언으로 폐기수순을 밟던 TPP를 CPTPP로 재구축하는 선봉장 역할을 자임
 - 일본은 장기적으로 TPP를 통해 아·태지역내 자국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해 왔으며, 향후 CPTPP를 주도함으로써 그 수준을 더욱 강화해 갈 것으로 보임

□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

○ 미국의 TPP탈퇴선언 이후 RCEP를 통해 (미국 대신) 아·태지역내 자유무역의 중심에 서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구체화

- RCEP에는 ASEAN 10개국 및 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 등 총 16개국이 협상에 참여

※ RCEP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은 2012.11.20. 16개국 정상들이 협상을 개시하여 2015년말 타결을 목표로 했으나 참여국들간의 이견으로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는 상태. 당초 아시아지역 경제권에서의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이 제안하였으나 현재는 중국이 협정의 추진을 주도하는 형국임

3. 정책적 시사점

□ 역내 무역협정(TPP, CPTPP, RECEP) 추진을 둘러싸고 미·일·중 3국이 아·태지역 내 자국의 경제적 입지 확대를 꾀하고 있음

○ 중국의 RECEP를 통한 역내 경제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(오바마행정부)에서 주도한 TPP가 좌초될 위기에 몰렸으나, 베트남 다낭 APEC회의(11.11)에서 주도적으로 CPTPP를 출범시킨 일본의 영향력이 향후 협상과정에서 크게 확대될 전망

- 높은 수준으로 무역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의 CPTPP 협정안에 대한 각국의 비준을 2018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

- 신규가입에 대비한 협의규정도 마련함으로써, 현재 미가입국인 필리핀, 태국의 가입을 유도하고, 더불어서 미국의 복귀도 기대하는 분위기

□ 일본 주도의 CPTPP라는 돌발 상황 아래 우리나라의 전략적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

-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주도의 TPP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며, 오바마 행정부에서 뒤늦게 참여의사 타진하였으나,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선언 이후 관심이 더욱 낮아진 상태
- 아·태 무역질서를 둘러싼 미·일·중 3국의 주도권 경쟁구조 속에서 CPTPP에 대한 적극적 참여여부 판단이 중요한 과제
- 참여에 따른 득실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선결돼야 하겠지만, 기존의 자유무역협정(FTA) 확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CPTPP에의 적극적 참여가 바람직
 - 높은 무역의존도, 세계 52개국과의 FTA가 타결·발효되어 있는 시점에서 CPTPP에의 참여는 세계적인 FTA확산추세에 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임
- 협상진행 중인 RCEP 내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과 비중에 관한 판단도 중요

- 우리나라는 10.17~28일 인천 송도에서 RCEP정상회의를 주관하여 공동선언문 발표를 이끌어내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 중
- CPTPP의 진척으로 RCEP 협상추진이 다소 지장받을 가능성은 있으나, 제1교역국 중국과의 경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협상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**
- 참여국 중 인도의 경우 RCEP의 핵심조항 중의 하나인 서비스산업 개방에 부정적인 점, 호주 등 RCEP와 TPP에 동시 참여국들이 CPTPP에 우호적인 점 등이 향후 RCEP 협정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이라는 전망

□ 아·태지역내 강국들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탈퇴해 있는 현 시점이 우리나라가 CPTPP에 참여할 호기

○ 우리 정부가 그동안 TPP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주된 배경이 되어 온 한·미FTA와의 중복문제가 (일시적으로) 해소된 상황임

- 트럼프행정부와의 한·미FTA개정 문제에 대한 부담도 일정부분 비켜갈 수 있을 것임.

[작성: 이종인 경제정책실장 ☎02-3786-3809]